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s Prepared for the Stable Elderlyhood
Financially and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m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조 교 수 이 선 형*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최 은 희

Dept. of Elderly Welfare of Hoseo Univ.
Associate Professor: Lee, Sun Hyung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Fellow: Choe, Eun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elderly approaching old age in our society confront having a harsh economic statu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eparation of the pre-elderly for overcoming this status. In particular, it focused on financially stable pre-elderly persons. The data from the 2008 Chungcheongnam-do Welfare Plan for Five Years collected by the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was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question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735 persons (ages 55-64) living in Chungcheongnam-do. Five hundred and eighty-on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using SAS,

* 주저자, 교신저자: 이선형 (yisunh@hoseo.edu)

version 9.1.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important variables needed to find the factors related to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adult-child relationship, the preparation plan for old age, etc. The results showed that job and health status were key to preparation for financial stability among the elderly. Another finding was the importance of concrete financial planning for the elderly; that is to say, the pre-elderly who made more concrete plans than indefinite ones were likely to belong to stable households. Another significant finding was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factors for the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elderly. These results should serve as reference data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becau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elderly will be vital for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new and old generations.

Key Words : 경제적 노후준비(Elderly life's financial preparation), 안정적인 노후준비(Financially stable preparation), 예비노인(Pre-elderly, age 55~64)

I. 서론

통계청(2009)에서 보고하는 평균수명¹⁾에 의하면 65세 이후 남성은 평균 11.5년, 여성은 평균 18.3년의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통계청, 2009). 남녀의 평균 결혼연령 차가 평균 3세 가량²⁾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두 부부의 가족생애주기상 노년기는 남편의 경우 14.5년, 부인의 경우 2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이른 퇴직과 평균수명의 연장 가능성 등의 변수를 감안한다면 노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여지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 노후보장이 비교적 오래 동안 준비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적 노후보장에 의한 노후준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준비율은 2004년 28.3%,

2009년 33.8%에 불과하다³⁾. 전체 연령(18세 이상 가구주)이 조사된 통계청(2009) 사회조사 의 노후준비율이 66.3%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⁴⁾.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사적 이전소득을 통해 생활을 해결하는 비중이 높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통계청, 2010).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는 인구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노령인구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의 절대적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 및 노동력 고령화 문제, 부양 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부양지수의 증가, 노인에 대한 신체적·경제적 부양문제,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최대한 고령화를 늦추는데 주안점

1) 평균수명 남성: 76.5세, 여성: 83.3세(통계청, 2009)

2) 남편 평균 초혼 연령 31.6세, 부인 평균 초혼연령 28.7세 (통계청, 2010).

70, 80대 노인의 결혼 연령차가 3세 가량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결혼했을 당시의 통계를 구할 수 없고 1999~2009의 평균 결혼연령 차가 3세 가량이므로 이를 대신 사용함.

3) 2004년 조사결과 비노인가계의 노후준비율은 66.1%였음.

4)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 2005년 55.0%, 2007년 61.8%, 2009년 66.3%였음.

을 두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정부 정책의 최대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1차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42조 2천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2차 대책에 75조 8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대한민국정부,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부양부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현재 노인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던 시대의 부모와 달리,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부담지우지도 못하고, 자력(自力)으로 노후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을 상회하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⁵⁾ 정부에서는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 2008년 시행하였다. 이 제도에서는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단독수급자일 경우 월 최고 9만원 부부수급자의 경우 최고 14만 4천원까지 제공하고 있다(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그러나 지난 2007년 단행된 연금개혁으로, 2028년의 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이 애초 60%에서 40%로 떨어졌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을 소득 하위 70%에서 40%로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한겨레신문 2010.7.13). 정부가 계획한대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하위 40%로 축소하고자 한다면 2030년 정도에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조차도 충분한 성숙기간을 보내

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수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아래 세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감소되고 현재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부담과 자녀세대의 부양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이들의 노후준비 여력도 크지 않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뿐 아니라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혹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금은 아래 세대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통계청의 2008 사회통계조사에서 학생이 있는 30대 이상 가구 중 79.8%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세대의 부양도 몹시 큼을 알 수 있다. 양세정(2010)의 적자가계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40대가 적자가계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적자가계를 구성하는 이유 또한 교육비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선택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아래 세대의 희생을 통한 노인의 사적 부양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는 없다. 현재 40~50대의 경우 경제 호황기에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해온 세대이다. 그러나 현재 20~30대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경제 불황을 맞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여건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세대이다. 점점 아래 세대로 갈수록 노후준비를 위한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마저도 엿보인다. 이는 향후 노후에 대한 자립적인 준비가 더욱 필수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중년기와 노년기의 노후준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5) 2008년 노인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9.0%, 소비지출 기준 26.3%이며, 전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14.9%, 소비지출 기준 13.4%임.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유진, 2005; 박창제, 2008;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황승일, 2000; Anderson, Bechhofer, McCrone, & Stewart, 2000). 이러한 연구들은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소득 및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두 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 가족의 경제적 노인 부양 행동은 선진국과 차이가 있는데(최정혜, 2009) 이러한 가족적 요인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적 요인이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로 현재 노후준비율은 주로 공적연금 가입 여부, 소득대체율, 은퇴자산 적정성 등으로 측정되어 왔다. 그러나 노후준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이들이 갖는 특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노후에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되 기본적으로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적 요인과 노후계획 요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의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안정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예

비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가계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안정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노인 가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경제적 노후준비⁶⁾의 개념과 측정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상황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세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아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완화 및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노인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적정소득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조작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왜냐하면 노후에 기대하는 생활수준, 현재 소비생활, 직업, 가정상황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 기대여명, 물가상승률, 경제상황 등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조작화하여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의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도라는 개념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영역에서의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중 경제적 준비는 총 8 문항으로 ‘노후를 위해 절약하며 생활한다’ ‘노후의 생활비는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6) 노후준비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여가준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노후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차원의 준비로 보고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등으로 ‘전혀 아니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작화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 경우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추정해볼 수 있는 한 척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노후준비의 적정성(adequacy)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과 은퇴자산의 객관적 적정성 추정을 들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소득의 적정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노후소득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소득대체율은 대체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45~80%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이선형, 2000; 석재은, 2005; 안종범·전승훈, 2005; 류건식·이봉주·김동겸, 2009). 은퇴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로는 여윤경(1999)과 여윤경·김진호(2007)가 대표적이다. 이중 여윤경·김진호(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자산의 적정성을 다음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① 총 순자산에 총 은퇴소비로 나눈 비율분석 ② 총 은퇴소비를 총 순자산에서 차감한 잉여자산분석 ③ 총 은퇴소비에 비해 총 순자산이 부족할 확률. 또한 이지영·최현자(2009)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주택 등을 고려한 은퇴자산과 은퇴 후 소요자금을 계산하여 둘을 비교하여 은퇴자산이 더 많은 경우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소요자금이 더 큰 경우 불충분하다고 가정하여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조작화한 연구도 있었다.

반면 은퇴준비 적정성 내지 충분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관적 진단도 중요하다. 물론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후준비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냐에 따라 은퇴를 위한 재정 준비와 그에 따른 실행여부, 방법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Joo, S.-H. & Pauwels, 2002). 이에 따라 주관적인 개념, 즉 조사대상자 스스로 노후준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응답하게 함으로써 적절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병행되고 있다. 홍성희·곽인숙(2006)의 경우 경제적 준비수준을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지 수준 1=하 3=중 5=상으로 측정하였으며, Malroux & Xiao(1995)는 노후소득 적절성(adequacy of retirement income)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당신은 퇴직 후 소득이 적절할 것이라고 느끼십니까”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통해 응답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노후소득의 적절한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Joo & Pauwels, 2002).

그러나 이와 같이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경제적 노후준비는 무엇이고 이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고 충분한 노후준비를 예측하기 위한 여러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 연구가 더욱 더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2.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은퇴를 앞둔 예비노인은 노인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원론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충실히 되어있어야 한다. 경제적 노후준비란 인생의 마지막 경제적 과업으로, 장기간동안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므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50-60대 예비노인들은 평균적으로 20-30대 초반의 자녀를 두고 있어 이들의 대학교육비 및 자녀 결혼 등을 위한 가계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기도 하다(양세정, 2009). 이에 따라 이들의 노후준비는 초·중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과(33.7%), 특히 최근 들어 ‘노후준비를 할 능력이 없다’는 비율(38.9%)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비율(32.6%)은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5, 2007, 2009). 같은 조사에서 65세 이상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61%로 이보다 훨씬 높아 노인이 되어도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선행연구에서 보면 노후준비율은 28-90% 정도로 조사대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009; 통계청, 2005, 2007, 2009; 이신영, 2009). 대개 조사대상이 젊은 층일수록, 조사연도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노후준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노인생활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64세 이하 비노인가계 노후준비율은 66.1%인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 28.3%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인 2009년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노인의 노후준비율은 33.8%로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의 경우에서도 2005년 노후준비율이 55.0%였으나 2007년 61.8%, 2009년 66.3%로 연도가 흐름에 따라 증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표 1).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기타공적연금)이 있을 수 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형태와 기타 저축이나 퇴직금 등의 다른 사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에서 보면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50.5%로 가장 많고, 예금·적금(49.9%), 사적연금(34.9%)의 순이었다(표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의 조사에서는 비노인가계의 구체적 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89.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개인연금(38.0%), 저축(28.4%)의 순으로 공적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얼마나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울 또한 몹시 낮다는 것도 특징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반면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1차적인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 공적연금 가입률은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강성호·김태완·김문길, 2008).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높았는데, 특히 40~50대 남성의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높았다(김경화, 2005). 이는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되어 이를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표 1〉 노후준비 방법 (18세 이상, 복수응답)

(단위: %)

연도	계	준비하고 있음	준비 방법								준비하고 있지 않음	준비 능력 부족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운용	주식, 채권	기타		소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 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
2009	100.0	66.3	50.5	8.4	34.9	9.2	49.9	10.8	3.8	0.4	33.7	100.0	16.6	32.6	38.9	12.0
2007	100.0	61.8	51.7	8.2	31.9	8.6	50.2	11.5	3.1	0.2	38.2	100.0	19.8	34.9	32.6	12.6
2005	100.0	55.0	51.6	11.2	37.2	9.7	50.5	11.2	2.0	1.7	45.0	100.0	28.0	35.5	26.0	10.4

자료: 통계청(2005; 2007; 2009).

선진국의 결과와는 상이하며⁷⁾, 김경화(2005)의 연구에서 40-50대 대상자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이나 보험가입률이 65.2%에 이르고, 홍성희·곽인숙(2006)의 연구에서는 40대 봉급생활자 837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한다는 비율이 68.2%에 이르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준비율이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제적 요인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풍부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노후준비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양세정·이성림, 2009; 이신영, 2009; Anderson et al., 2000). 양세정·이성림(2009)의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여러 가계 상황을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은 총소득이 높고 소비지출 또한 많았으며, 저축액 및 총자산이 많고 대출은 적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순자산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희·곽인숙(2006)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 수준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들었고, 그밖에도 주택 자산 및 금융자산, 노후자금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이성림(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채는 부정적 영향이었으며 가계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양세정·이성림(2009)의 경우 노후준비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을 2가지 모델로 실시하였는

데 모델 1의 가계특성만 포함했을 때에는 20대에 비해 50대와 60대에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고, 자가 보유 가계나 향후 상속을 기대하고 있는 가계가 노후준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특성변수를 포함하였을 때에는 가계소득(+)과 자산수준(+), 부채(-)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주택(소유), 거주지역(도시), 현재소득인식(공정적), 전반적 생활여건(향상) 변수가 노후준비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나(박창제, 2008) 소득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이라 여겨진다.

2)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성별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빨리 진입하지만 빨리 퇴장하는 경향과 더불어, 진입비율이 낮고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아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lroux & Xiao, 1995; 박창제, 2008; 이신영, 2009).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생애주기가 진전되어 노년기에 가까워지므로 더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우세하다(강유진, 2005; 홍성희·곽인숙, 2006⁸⁾;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Malroux & Xiao, 1995).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후준비 행동을 더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강유진, 2005; 박창제, 2008; 이신영, 2009), 이는 노후준비에 대한 계획성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 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직업유무로 보

7) Junk, V. W., Fox, L. K., Einerson, M.J. and Taff, L. K.(1997)의 연구에서 퇴직전 조사대상자들에게 기대하는 퇴직 후 소득원에 대한 응답에서 사회보장의 비중이 90%, 저축 66.0%, IRA 63.3%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조사는 40대 이상 봉급생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았을 경우 직업이 있는 집단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으며(박창제, 2008), 직업이 있는 집단 중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일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노후준비 저축액도 더 높고, 은퇴소득에 대해 적절하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하연, 1997; Malroux & Xiao, 1995; Anderson et al., 2000). 이와 상반되는 결과도 있었는데 양세정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전문/자영업일수록 임금근로자가계에 비해 노후준비 가능성이 적어졌는데, 이는 전문/자영업의 경우 은퇴 예상 연령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준비를 등한히 한 결과로 보고 있다. 건강수준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노후준비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다(이신영, 2009).

그러나 인구학적 요인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김경화(2005)의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학력, 수입, 가계부채에 따라서도 노후준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성희·곽인숙(2006)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 직업 등이 노후준비 저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nderson et al.(2000)에서도 은퇴를 하지 않은 50대 미만 연령의 노후준비에 성별이나 혼인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소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이지만 Malroux & Xiao(1995)의 연구에서는 결혼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는 은퇴소득의 적절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 등(2009)의 경우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연령, 학력, 성별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가족적 요인

한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녀에 의한 사적부양은 노인부양의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2004년 기준 노인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전체 가구의 85.8%) 다음이 이전소득(전체 가구의 41.8%)인 것으로 나타나(최효미, 2007), 상당수의 노인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을 받고 있다(통계청, 2010).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조사한 최정혜(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노부모 부양행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4점 만점에 미국 2.43, 한국 3.05), 특히 미국은 정서적 부양행동 점수가 높았던 데에 반해(3.28) 한국은 경제적 부양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2). 또한 유럽 10개국⁹⁾의 50세 이상 성인의 금전 및 시간 자원 이전패턴을 조사한 Attias-Donfut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시간자원만 이전하는 경우가 89.5%, 금전자원만 이전하는 경우가 6.5%, 시간과 금전 모두 이전하는 경우가 4.0%였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문제는 동양적인 문화(최정혜, 2009)와 노인가구의 높은 빈곤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교육비 등에 대한 자녀세대로의 과다 지출(이성림, 2005a, 2005b) 등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력이라는 요인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준비와 관련한 가족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적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결혼상태로, 기혼,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후준비가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와(보건복지가족부, 2009), 영향이

9) 유럽 10개국: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없다 라는 연구결과(Malroux & Xiao, 1995)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자녀유무의 경우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신영(2009)은 노후준비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노후준비를 더 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4) 노후계획 및 교육

앞에서 언급된 소득, 지출,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요인, 가족적 요인의 경우 이미 변화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몇몇 연구에서는 노후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 소득 적절성 인식이나 노후준비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어 의미가 있다(Malroux & Xiao, 1995; Anderson et al., 2000; 양세정·이성림, 2009). 즉 단기보다는 장기 계획을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노후소득을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계획의 여부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후소득 적절성이나 충분성, 안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노후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적절성이나 충분성, 안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생애주기 초기에 노후계획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볼 수 있고 이는 정책적으로도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세정·이성림(2009)의 연구에서도 노후준비 여부별 재무관리 행동을 살펴본 결과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의 점수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노후 가장 중요한 준비는 건강한 신체(50.1%)와 경제적 준비(44.7%)를 차지했으나 실제 평생교육참여 비율도 낮고(13.3%)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욕구는 높았으나(41.1%) 노후경제생활에 대한 교육욕구는 상당히 낮은 편(1.0%)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즉 은퇴준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생애에 걸친 인생설계가 장기적인 계획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은퇴준비교육은 아직까지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단편적이어서 이에 대한 다양하며 필수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홍석태·양해술(2009)의 연구에서 노후교육의 필요성 인식 변수와 노인 교육 참여 욕구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변수가 은퇴준비를 36.8%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설문 자료로, 충남 65세 이상 노인과 55-65세 미만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중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활용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각 50부씩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08년 9월 24일에서 10월 10일까지 17일 동안 16개 시·군 노인복지 담당자를 통하여 충남에 거주하는 55-64세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대상의 예비노인은 노인연령(65세 이상)에 가장 근접한 대상으로서 이들의 노후준비의 실태와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10년간의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을 예측해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는 배포된 800부 중 설문조사 기간 내에 회수된 15개 시·군의 735부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본 논문의

분석은 노후준비 조사내용을 충실히 응답한 설문지 581부를 최종적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앞서 설명한 설문 자료는 예비노인의 개인적 특성, 건강생활, 소득 및 경제활동(소득, 노후준비, 일자리), 여가문화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분석에 필요한 개인관련 요인과 경제적 상태, 자녀 및 가족관련 요인, 노후계획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2>와 같

다. 이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 수립 보고서에서 측정한 방법이며, 새로운 변수를 형성한 경우 새로운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도이다. 이를 중심으로 안정집단을 형성하는 노인들과 노후준비가 불안정한 혹은 중간 정도인 노인들을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 여부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집단을 형성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도의 조작적 정의는 “과거 노후준비 시작 여부”와 “현재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

〈표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

변수 범주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준비를 (과거) 1=해왔다, 2=하지 않았다 · 노후준비를 위해 (현재) 1=저축을 하지 않는다, 2=저축을 한다 · 1&1=안정, 1&2, 2&1=중간, 2&2=불안정
독립변수		
개인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학력 · 직업 ·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남, 2=여 · 1=초등졸 이하, 2=중등학교 졸, 3=고졸이상 · 1=무직, 2=취업 · 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경제적 (주·객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현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_____ 만원 · 현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녀 및 가족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상태 · 자녀동거 여부 ·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 자녀 생활비 지원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혼, 2=사별, 이혼별거, 미혼(결혼한적 없음) · 1=동거, 2=비동거 · 1=자녀(장남, 아들, 딸, 능력있는 자녀) 2=자녀이외(부모자신, 국가나 사회, 기타) · 노후에 가장 의존하게 될 경제적 지원은 1=자녀 생활비 지원임, 2=기타 지원임
노후계획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은퇴 연령 · 노후계획의 구체성(1) ·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1=구체적, 2=약간 구체적/추상적, 3=계획 없음 · 노후 경제상태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 설문 문항 수

* 1=매우 나쁘다, 2=나쁜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 1=매우 안정적인 것, 2=안정적일 것, 3=보통, 4=불안정할 것, 5=매우 불안정할 것

여부”를 통해, 과거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안정적인 노후준비 상태로 보았다. 또한 “과거에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현재에는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혹은 “과거에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않고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흔들릴 수 있는 중간정도의 노후준비 상태로, “과거에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고 현재에도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불안정 노후준비 상태로 보았다.

독립변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신하연, 1997; 강유진, 2005; 홍성희·곽인숙, 2006; 박창제, 2008; 양세정·이성림, 2009; 이신영, 2009; 홍석태·양해술, 2009; Malroux & Xiao, 1995; Anderson et al., 2000) 다음의 독립변수가 선정되었다(표 2).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안정으로 하고 있는 예비노인의 특성을 그렇지 않은 노인과 비교하기 위하여(연구문제 1)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2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종속변수인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여부가 이항변수이므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이 모든 자료 분석은 SAS 9.1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2. 안정적 노후준비 예비노인의 특성 비교

전체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도에 따라 예비노인을 구분한 결과, 불안정집단이 가장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내용	구분	N	백분율	내용	구분	N	백분율	
성별 N=581	남	331	57.0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N=580	장남	54	9.3	
	여	250	43.0		아들	72	12.4	
결혼상태 N=581	기혼	476	81.9		딸	8	1.4	
	사별	78	13.4		능력있는 자녀	155	26.7	
	이혼별거	20	3.4		부모자신	192	33.1	
	기타	7	1.2		국가나 사회	77	13.3	
학력 N=576	무학·초등졸	256	44.4		기타	22	3.8	
	중졸	155	26.9		자녀동거 여부 N=581	동거	205	35.3
	고졸이상	165	28.6			비동거	375	64.7
직업 N=581	무직	202	34.8		노후 가장 의존하게 될 경제적 자원 N=581	자녀	79	13.6
	자영서비스업	159	27.4	본인 경제활동		122	21.0	
	사무전문직	50	8.6	공적연금		125	21.5	
	기타	170	29.3	국가의 도움		115	19.8	
건강상태 (주관적)	매우 나쁨	13	2.2	보험·저축		84	14.5	
	나쁜 편	104	17.9	기타		56	9.6	

〈표 3〉 계속

내용	구분	N	백분율	내용	구분	N	백분율
건강상태 (주관적) N=581	보통	278	47.8	희망은퇴연령 N=567	60세 미만	97	17.1
	좋은 편	169	29.1		60~64세	188	33.2
	매우 좋음	17	2.9		65~69세	208	36.7
			70세 이상		74	13.1	
소득 N=581	없음	42	7.2	노후계획의 구체성 N=580	구체적	49	8.4
	50만원 미만	110	18.9		약간 구체적	225	38.8
	50~100만원 미만	138	23.8		추상적	134	23.1
	100~200만원 미만	167	28.7		계획없음	172	29.7
	200만원 이상	124	21.3				
현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 N=581	매우 나쁨	17	2.9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기대 N=581	매우 안정적인 것	11	1.9
	나쁜 편	116	20.0		안정적인 것	94	16.2
	보통	371	63.9		보통	277	47.7
	좋은 편	74	12.7		불안정할 것	147	25.3
	매우 좋음	3	0.5		매우 불안정할 것	52	9.0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47.7%), 안정집단이 그 다음(34.8%), 중간집단은 가장 비중이 적었다(17.5%)(표 4). 이는 과거에 노후준비를 시작했던 사람은 현 시기에 노후준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이 시기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후준비는 생애주기 초기에 이루어져야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먼저 안정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그렇지 못한 기타 예비노인과 비교해 살펴보면 안정적 노후준비를 하는 빈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인 경우, 연

령이 낮은 경우, 기혼인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건강한 경우였다. 반대로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기혼이외의 결혼상태, 무학·초등졸인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불편한 경우 불안정 집단에 속하는 빈도가 높았다(표 5). 특이한 것은 교육수준의 경우 무학·초등졸의 경우 불안정 집단에 속하는 빈도가 높았으나 중졸과 고졸이상은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불안정/안정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직업의 경우 직업이 있을 때 안정적 노후준비를 할 비율이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얻게 되고 안정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

〈표 4〉 안정적 노후준비 예비노인과 기타 예비노인의 구분

(단위: %, N=581)

		노후준비를 (과거에)		전체
		시작하지 않았음	이미 시작함	
저축을 (노후준비를 위해)	하고있지 않음	47.7 (A)	10.0 (B)	57.7
	하고 있음	7.5 (B)	34.8 (C)	42.3
전체		55.2	44.8	100.0

A: 불안정집단, B: 중간집단, C: 안정집단

〈표 5〉 안정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노인과 기타 예비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차이 분석

(단위: %, N=581)

노후준비	성별 ¹⁾		결혼상태 ²⁾		교육수준 ³⁾			직업 ⁴⁾		건강상태 ⁵⁾			계
	남	여	기혼	기타	무학·초등졸	중졸	고졸 이상	유	무	불편	보통	건강	
불안정	43.5	53.2	43.7	65.7	59.0	39.4	37.0	40.6	60.9	75.2	46.8	31.7	47.7
중간	20.2	14.0	18.9	18.9	13.3	18.1	24.2	18.5	15.8	11.1	17.3	22.0	17.6
안정	36.3	32.8	37.4	22.9	27.7	42.6	38.8	40.9	23.3	13.7	36.0	46.2	34.8

1) $\chi^2=6.46$ df=2 p<.05 2) $\chi^2=16.7$ df=2 p<.01 3) $\chi^2=27.1$ df=4 p<.01

4) $\chi^2=23.6$ df=2 p<.01 5) $\chi^2=55.6$ df=4 p<.01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50-59세가 60세 이상보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재정적으로 은퇴에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던 Anderson, Bechhofer, McCrone and Stewart(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기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적으로 은퇴에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Anderson et al., 2000).

다음으로 안정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노인의 경제적 특성과 자녀관련 특성을 그렇지 못한 기타 예비노인과 비교해 살펴볼 때, 안정집단을 형성하는 경우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현재 경제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6). 자녀관련 특성의 경우 부모부양

책임에 대해 자녀이외의 대상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생활비지원기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동거여부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불안정집단의 경제적 특성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현재 경제상태가 나쁜 편이라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들의 자녀관련 특성의 경우 부모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자녀생활비 지원 기대를 하는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처럼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경우 노후준비도 어려워지는 결과를 반영한다 하겠다(Anderson et al., 2000; 양세정·이성림, 2009). 반면에 노후준비 안정도는 과거의 노후준비 시작 여부와 현재의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표 6〉 안정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노인과 기타 예비노인의 경제상태 및 자녀관련 특성 차이 분석

(단위: %, N=581)

노후준비	경제적 특성				자녀관련 특성						계
	소득 ¹⁾ (평균: 만원)	현 경제상태 인식 ²⁾			부모부양 책임 인식 ³⁾		자녀생활비 지원 기대 ⁴⁾		자녀동거 여부 ⁵⁾		
		나쁜편	보통	좋은편	자녀	기타	함	하지 않음	자녀 동거	자녀 비동거	
불안정	81.35	81.2	41.8	18.2	52.2	43.3	70.9	44.0	44.4	49.3	47.7
중간	139.75	10.5	18.3	26.0	15.9	19.2	15.2	17.9	18.5	17.1	17.6
안정	149.49	8.3	39.9	55.8	31.8	37.5	13.9	38.0	37.1	33.6	34.8

1) F=29.0 df=2 p<.01 2) $\chi^2=94.6$ df=4 p<.01 3) $\chi^2=4.7$ df=2 p<.10

4) $\chi^2=22.1$ df=2 p<.01 5) $\chi^2=1.3$ df=2

〈표 7〉 안정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노인과 기타 예비노인의 노후관련 특성 차이 분석

(단위: %, N=581)

노후준비	희망 은퇴시기 ¹⁾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예측 ²⁾			노후계획 ³⁾ (경제적)			평균
	64세 이하	65~69	70이상	나쁜편	보통	좋은편	구체적	추상적	계획 없음	
불안정	40.9	51.3	47.0	78.4	37.9	15.2	19.9	13.0	67.1	47.7
중간	20.0	15.5	18.6	12.1	18.4	25.7	19.3	18.8	3.2	17.6
안정	39.1	33.2	34.5	9.5	43.7	59.0	39.3	29.0	8.1	34.8

1) $\chi^2=3.3$ df=4 2) $\chi^2=136.2$ df=4 $p<.01$ 3) $\chi^2=50.2$ df=4 $p<.01$

현 경제상태 및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생활비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 불안정 노후준비가 많았는데 이는 역으로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동거여부에서는 독신/노부부일 경우 불안정한 경향이, 기타일 경우 안정 노후준비 집단인 경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노후관련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희망 은퇴 시기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안정예비노인이 노후경제생활에 대한 예측을 좋은 편이라 응답하는 경향이, 노후계획은 구체적이라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후관련 희망 은퇴시기가 늦을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고 노후준비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노후준비가 불안정한 경우 현 경제상태가 나쁜 편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후경제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3.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 여부와 과거 노

후준비 시작 여부, 이를 교차한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유무, 건강상태, 소득수준, 현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자녀생활비지원 기대, 노후계획의 구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거 노후준비 시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시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 소득수준, 현 경제상태 인식, 자녀생활비지원기대, 노후계획의 구체성이 영향을 미쳤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노후준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1.84배 높았다. 나머지 현 경제상태 인식이나 자녀생활비지원 기대, 노후계획의 구체성 변수는 현재 노후준비 저축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경향과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일치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2)의 연구결과인 현재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 여부, 과거 노후준비 시작 여부 변수를 통해 과거 노후준비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는 집단이 노후준비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 현 경제상태 인식, 자녀생활비지원 기대, 노후계획의 구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

〈표 8〉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준거집단)	경제적 노후준비								
	현재 저축 여부			과거 시작 여부			안정 여부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개인관련 변인									
성별(남성)	-2.73	1.78	1.84**	-2.83	1.86	1.17	-3.65	1.84	1.52*
연령(55~59세)	0.611	0.24	0.82	0.15	0.24	1.02	0.14	0.81	0.85
교육수준(무학/초졸)									
중졸	-0.200	0.20	0.72	0.02	0.21	1.30	-0.16	0.71	0.92
고졸이상	-0.329	0.25	0.56**	0.25	0.26	0.68	-0.08	0.56	0.54**
직업유무(무)	-0.572	0.28	1.51*	-0.39	0.28	1.05	-0.61	1.51	1.33*
건강상태(불편)									
보통	0.412	0.24	2.20**	0.01	0.24	1.27	0.28	2.19	1.71*
건강	0.787	0.32	2.11**	0.23	0.32	1.84*	0.53	2.11	1.82*
경제적 변인									
소득(50~100미만)									
50미만	0.747	0.35	0.52**	0.60	0.34	0.43**	0.59	1.91	0.41**
100~200미만	-0.65	0.32	0.94	-0.85	0.33	1.11	-0.9	1.79	0.96
200이상	-0.06	0.31	1.00	0.10	0.32	1.10	-0.04	1.91	1.01
현경제상태인식(나쁨)									
보통	0.004	0.36	2.72***	0.09	0.37	2.21**	0.001	2.71	3.26***
좋음	1.000	0.34	4.41***	0.79	0.33	3.03**	1.18	4.41	3.98***
자녀 및 가족관련 변인									
결혼상태(기혼)									
기타	1.484	0.43	0.91	1.10	0.44	1.06	1.38	0.90	0.98
자녀동거 여부(동거)	-0.098	0.31	0.96	0.05	0.32	0.86	-0.02	0.96	0.90
부모부양책임 인식(자녀)	-0.039	0.21	0.98	-0.15	0.22	1.31	-0.10	0.97	1.05
자녀생활비지원기대(기대)	-0.024	0.20	1.75*	0.27	0.20	2.60***	0.05	1.74	2.55**
노후계획 관련 변수									
희망은퇴연령	0.557	0.33	0.99	0.95	0.35	0.99	0.93	0.99	0.99
노후계획의 구체성(구체)									
약간구체/추상	-0.009	0.02	0.54**	-0.01	0.02	0.27***	-0.01	0.53	0.36***
계획없음	-0.620	0.24	0.16***	-1.03	0.25	0.12***	-1.02	0.15	0.18***
상수	-2.74			-2.83			-3.65		
-2 LogLikelihood Chi-square (df=14)	771.01			777.49			730.68		

*p<.10 **p<.05 ***p<.01

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경우 여성인 경우,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경우, 현 경제상태 인식이 보통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 자녀생활비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노후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무학/초졸인 경우 고졸이상에 비해 안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즉 성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재 저축할 가능성이 1.52배 높으며, 교육수준이 무학/초졸에 비해 고졸이상의 노후 경제적 준비 가능성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1.33배, 건강상태가 안좋은 사람에 비해 보통이나 좋은 사람의 노후 대비 가능성은 1.71배, 1.82배 높았다. 소득수준이 50~1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50만원 미만은 59% 가량 안정된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 경제상태를 보통이나 좋다고 응답한 경우 각 3.26배, 3.98배 노후준비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생활비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기대하는 경우에 비해 노후준비 저축을 할 가능성이 2.55배 높았다. 노후계획이 구체적인 사람에 비해 노후계획이 없거나 추상적인 사람은 노후준비 저축 가능성이 64%, 8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성별이나 교육수준의 경우 교차분석의 결과와는 상반되며 일부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상반되고 있다. 여타 상황들을 통제할 경우 남성의 경우 현재 저축가능성이 떨어지며 이것이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 여부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91.8%가 기혼상태이고 여성의 경우 68.8%가 기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인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노후에 혼자 생활을 이끌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노후준비에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게 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역시 고졸이상의 노후준비는 무학/초졸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선행연구(강유진, 2005; 박창제, 2008; 이신영, 2009)의 결과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양세정 등(2009)의 결과에서는 전문/자영일 수록 임금근로자가계에 비해 노후준비 가능성이 적어졌는데, 이를 전문/자영의 경우 은퇴예상연령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노후준비를 등한히 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고졸이상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하여 이들이 노후준비를 등한히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1. 연구결과

본 논문은 충청남도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예비노인 581명의 노후준비 안정도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노후계획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현재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42.3%였으며, 과거에 노후를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였던 사람이 44.8%에 해당하였다. 이를 교차시켜 노후준비를 이미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노인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대상이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거에 노후준비 시작도, 현재 노후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불안정한 예비노인의 비율이 47.7%에 이른다. 이는 상당수의 예비노인은 앞으로 불안정한 노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차분석 결과 노후준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의 특징은 교육수준이 중졸이상인 경우, 결혼상태가 기혼일 경우, 직업

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평균소득이 높은 경우, 현재 경제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이 자신이나 국가에 있다고 할 경우, 자녀생활비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노후계획이 구체적인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노후준비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를 밝히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변인에서는 성별, 직업유무,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경제 및 가족적 변인에서는 소득수준, 현 경제상태 인식, 자녀생활비지원 기대였으며, 노후관련 변수에서는 노후계획의 구체성이었다. 성별이나 학력은 교차분석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높고 학력이 높은 경우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에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직업은 과거의 노후준비 시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현재 저축과 안정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nderson, M. et al.(2000)에 의하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은 분위별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노후준비 가능성을 높였으며 직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넷째,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계획의 구체성 등도 영향을 미쳤는데, 객관적 지표인 소득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에 5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준비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인 인식인 현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이를 긍정적이라 인식할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여길 때 준비를 더 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노후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가의 변수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에 객관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인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가족변인에 있어서는 자녀생활비 지원에 대한 기대 여부 변수가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현재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았으나 자녀생활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경우는 과거 일찍이 노후준비를 시작하였고 현재 안정가계가 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준비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각 가정이 초·중년기를 보내면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노후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기대할 다른 원천이 없을 경우 지출의 우선순위를 노후준비에 두게 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중 하나는 직업과 건강상태였다. 이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준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이들의 노후준비 행동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노인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노후에 얼마나 자립적인 생활을 해주느냐에 따라 중년층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감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건강한 이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는 노후준비에서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노후준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사람일수록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게 하였다. 즉 노후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경우와 자녀생활비지원 기대를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양세정(2010)의 연구에서 적자가계 특성 연구에서 40대의 38.3%가 적자가계였으며 특히 군집분석을 통한 가족유형 분류 결과 40대의 61.3%가 교육비 지출 과다로 인한 적자가계 유형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중년기 가족은 각 비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준비가 소득 5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소득이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후의 집단에서는 소득이 노후준비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지출을 어느 비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가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즉 자녀의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노후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경우 노후준비에 있어 안정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미있는 결과는 노후준비의 객관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요소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지영·최현자(2009)의 경우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비교한 결과 객관적으로 부족한 경우 주관적으로 부족하다 응답한 경우가 63.4%이며, 객관적으로 충분하고 주관적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2.7%인 것으로 볼 때 은퇴준비에 있어서의 주관성과 객관성은 상관관계가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변수는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55-64세라는 연령적 특성상, 그리고 가족생애주기상 생활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필요에 비해 자신들의 소득이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들 시기의 재정적 필요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실한 노후로 이어질 수

는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예비 노년기 동안의 현명한 가계재무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의 가족적 요인에 해당하는 자녀 관련 변수 중 자녀생활비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집단의 노후준비도가 안정적이었던 것도 의미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특히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행동 점수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최정혜, 2009),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시간자원만 이전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Attias-Donfut et al., 2005) 한국에서는 자녀가 노부모에게 사적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재기(2007)의 논문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만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의 수가 적고 재산을 상속하려는 경향이 높아 노부모의 경제상황에 자녀들은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해볼 때 자녀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노후준비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앞으로 자녀세대에게서 노후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및 문화가 되었을 때 이들의 정신적, 현실적 어려움이 크게 다가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앞으로 자신들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자립적인 의식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조사대상이 충청지역에 한정 되어있다는 점이다. 충청지역의 경우 고령화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전체 일반 노인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의 노후준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

여 이러한 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결과인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변수, 즉 성별, 교육수준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1) 강성호, 김태완, 김문길(2008),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서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2)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3)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front_main/index.jsp
- 4) 김경화(2005).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 6) 류건식, 이봉주, 김동겸(2009). 사적연금 소득 대체율 수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보험학회지 83, 93-121.
- 7)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0(3), 275-297.
- 8)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9) 석재은(2005).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 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26(1), 79-113.
- 10) 신하연(1997). 중년기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안종범, 전승훈(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 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5-33.
- 12) 안현선 · 김효민 · 안진경 · 김양희(2009). 중년기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13) 양세정(2010). 적자가계의 특성 및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35-159.
- 14) 양세정, 이성림(2009). 노후 경제적 대비 여부에 따른 가계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 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16.
- 15) 여운경(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41-59.
- 16) 여운경, 김진호(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2), 1-30.
- 17) 이선형(2000).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노후 월평균 생계비 산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이성림(2005a). 과소비 · 부채가계의 가계 경제 구조 분석: 과소비 · 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1), 73-95.
- 19) 이성림(2005b).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20) 이신영(2009). 도시 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205-224.
- 21) 이지영, 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215-230.
- 22) 정재기(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국제간 비교의 맥락에서. 한국인구학회지 30(3), 157-178.
- 23) 조추용, 송미영 · 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24) 최정혜(2009).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양행동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9(2), 611-627.
- 25)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8). 충청남도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 충청남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26) 최효미(2007).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노동리뷰 4월호, 69-80.
- 27) 통계청(2005, 2007, 2008, 2009).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2009년 이전은 사회통계조사)
- 28) 통계청(2008).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 29) 통계청(2009). 한국의 사회동향. 대전: 통계청.
- 30) 통계청(2010). 2010 고령자통계. 대전: 통계청.
- 31) 통계청(2010). 인구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4) 홍석태·양해술(2009).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5), 287-299.
- 35)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36) 홍성희·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 37)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38) Anderson, M., Li, Y., Bechhofer, F., McCrone, D., and Stewart, R.(2000). Sooner rather than later?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preparing for retirement. Ageing and Society 20, 445-466.
- 39) Attias-Donfut, C., Ogg, J., & Wolff, F. C. (2005). European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and time transfers. European Journal of Ageing 2, 161-173.
- 40) Joo, S.-H. & Pauwels, V. W.(2002). Factors affecting workers' retirement confidence: A gender perspectiv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3(2), 1-10.
- 41) Junk, V. W., Fox, L. K., Einerson, M. J. and Taff, L. K.(1997). Pre-retirees' perception of retirement incom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8(2), 41-55.
- 42) Lytton, R., Garman, E. & Porter, N.(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3.
- 43) Malroux, Y. L. & Xiao, J. J.(1995).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7-24.
- 44) Rigg, J. & Sefton, T(2004). Income dynamics and the life cycle. Journal of Social Policy 35, 411-435.

- 투 고 일 : 2010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22일